

청소년 정책토론회

“첫 18세 선거권!

10대 시민 정치참여의 방향”

- 일시 : 2020. 5. 27.(수) 16:00
- 장소 : 광주YMCA무진관

4.15총선 청소년참정권 광주연대,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목 차

- 발제1 -

만 18세 선거권 시대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으로서의 모의투표운동 -----	1
김진곤 /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 발제2 -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참정권 이야기 -----	24
김정빈 /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 토론 -

조재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29
문정은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33
정민기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	36
모꽃노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	37

만 18세 선거권 시대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으로서의 모의투표운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및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제언)

김진곤 (시흥YMCA사무총장, 4·15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장)

I. 들어가며 -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역사상 ‘시민’이란 재산과 교육을 가진 제3계급으로 왕정에 대항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근대의 특정 집단을 일컫는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참정’은 ‘선거권’으로 대표된다. 이 선거권의 확대가 시민계급의 확장을 선도하였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적 행위를 대리하는 대의정치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이후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육부촌에 모여 씨족의 대표자가 나라의 온갖 일들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지방호족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국가가 지속되다가 일제의 침략과 패망을 거쳐 민주공화국이 탄생되기까지 숱한 민중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는 정치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부당한 권력에 맞서 피흘려 묻은 우리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세계적으로 선거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형식상 절대 권력은 무너졌지만 인종, 성별, 재산, 교육정도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은 여전하였다. 왕정과 제국주의시대를 지나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 대의 정치의 원리가 구현되는 ‘공화국’ 형태의 국가체제를 선택하였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은 다시 독재자들의 껍박 속에 민주주의를 유린당하며 무늬만 ‘민주공화국’인 체로 긴 시간을 보내왔다.

30년전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인해 군인정치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직선제’라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다시 찾아왔고 실질적 민주주의 대한 열망을 고조시켜 5년 후에는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한 장미대선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마침내 2020년 만18세 청소년의 선거권시대가 도래하였다.

“현대 시민의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2007.6.8. 오마이뉴스 발췌)

만 18세 선거권 시대

그러나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6만명,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5만명등 만 18세이하 청소년 미래유권자 약 11만명이 참여한 청소년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올해 2020년 4.15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등교 연기, 청소년이용시설 폐쇄등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국 만17세 이하 8천여명이 청소년모의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지를 확인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내의 모의투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해석으로 학교내에서 모의투표운동을 전면 금지시키며 오히려 정치화 하였다. 이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여기고 적극 추진하는 세계사적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시민권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시민이지 못했던 여성과 시민일 수 없었던 유색인종들과 그 사회의 시민이어서는 안 되는 소수 종교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다. 고학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하루 빨리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나은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에 정치적 권리 따위는 나중에 누려도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억눌러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일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됨으로써 학교현장이 혼란할 것이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혼란을 핑계로 교복 입은 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정치 행위를 차별하려는 행위는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더이상 혼란만 이야기하지 말고 새롭게 참정권자로 초대된 만18세 유권자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희망의 이야기 전하며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시작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2017년 한국YMCA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첫 번째 자리에서 한 청소년활동가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고있는 청소년들 회원들조차 그들이 왜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청소년 참정

권 실현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서 과연 이것을 당사자 운동의 차원에서 추동할 수 있을까”는 자조 섞인 푸념이었다. 다른 활동가들도 그의 물음에 동의하며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단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독일과 같이 ‘청소년시민 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체제 안에서의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적기관, 청소년당사자 그리고 청소년단체와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내에서의 모의투표운동은 투표하기 전에 각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교육선진국이라 말하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등 적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주도로 각종 선거직전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부가 나서 연방선거 직전에 연방의회를 위한 주니어 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1999년 처음 실시된 모의투표에 독일 전역 10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선거일 7일 전 부터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며, 실제 선거 당일 정식 선거가 종료된 직후 청소년모의선거 결과를 먼저 발표한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선거시에 실시한다.

스웨덴은 보통선거가 있기 전에 중고교교장의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학생회가 정당원을 부르거나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세를 벌인다. 핀란드는 모의투표를 주요 교육과정의 하나로 삼아 국립교육청에서 대통령선거등의 주요선거에서 학교 내에서의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등의 국가기관이 직접 모의투표운동을 주관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게 될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정당의 가입과 활동은 민주주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법 개정의견 초안에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정부기관에서 조차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에서 앞장서 문제인 정부와 각 정당들과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닫힌 교문을 열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

회 또한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제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Ⅱ. 4.15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결과

1. 개 요

가. 추진일시 : 2019년 11월 ~ 2020년 4월, 6개월 간

나. 모의투표 방법 : 정당투표 / 온-오프동시 진행

다. 참여인원 : 총 선거인단 8,214명, 투표인원 6,030명 (투표율 73.4%)

라. 주최 및 운동본부

2020 청소년이 직접 뽑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지역)운동본부

-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등 연대체 구성
- 지역별 운동본부 구성, 모의투표운동출범 공동기자회견 등

2. 진행과정

2020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과정

Learning by voting. It's up to me!



가. 청소년실무자회의 진행, 권역별 회의

(1) 추진일시 : 2020년 1월 ~ 4월

(2) 진행내용 : 모의투표 계획 수립 및 공유, 개학연기등으로 인한 진행차질관련 협의, 매뉴얼 온라인 배포 등 진행

나. 연대단체 모집 및 협의

(1) 추진일시 : 2019년 12월 ~ 2020년 4월

(2) 진행내용 : 모의투표 중앙 및 권역별 연대단체 모집 진행

다. 교육매뉴얼 개발 및 제작 (청소년모의투표 시민교육)

(1) 추진일시 : 2020년 1월 ~ 3월

(2) 진행내용 : 민주주의-정치와 정당-선거와 선거제도 교육매뉴얼 제작

라. 선거인단 모집 및 모의투표 운동 진행을 위한 홍보물제작 및 게시

(1) 추진일시 : 2020년 2월 ~ 4월

(2) 진행내용 :

- 카드뉴스 24차 제작 (coming soon! 모의투표 외)
- 동영상 2차 제작
- 기타 웹자보 6회 및 홍보자료(스티커 및 포스터 등) 제작 - 게시

마. 선거플랫폼 제작 및 업데이트

(1) 추진일시 : 2020년 1월 ~ 4월

(2) 진행내용 : 18vote.net → 18vote.or.kr 로 주소변경진행, 정책질의서 업로드 및 플랫폼 콘텐츠 다양화 시도

바. 선거인단 모집 진행

(1) 추진일시 : 2020년 1월 ~ 3월

(2) 진행내용 : 민주주의-정치와 정당-선거와 선거제도 교육매뉴얼 제작

사. 정책질의서 발송 및 답변 게시

(1) 추진일시 : 2020년 2월 ~ 3월

(2) 진행내용

- 등록마감 전 사전등록된 40여개 정당에게 8개 키워드 21개문항 질의서 발송
- 3월 27일 마감 후 2차 발송
- 총 9개 정당 답변서 회신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우리당)

3. 운동지역 및 참여단체

- 총 참여지역 : 16개 지역

- 연대단체 : 140개 단체

번호	지역	운동 지역 및 연대 단체
1	중앙사무국 (4)	대안교육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YMCA전국연맹
2	강원도 (13)	춘천YMCA,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홍천군청소년수련관,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도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고정형),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LH장학행복꿈터, 푸름이지역아동센터, LH만천지역아동센터, 원주YMCA, 속초YMCA
3	경기도 (15)	구리YMCA,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한국청소년진흥재단경기지부, 희망샘도서관, (사)자연과함께하는생태환경연구원, 시흥YMCA, 안산YMCA, 안양YMCA, 용인YMCA, 용인르티나무도서관재단, 이천YMCA, 파주YMCA

4	경상남도 (20)	거제YMCA, 거창YMCA,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거창자원봉사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진주YMCA, 진주YWCA, 진해청소년전당, 창원YMCA, 창원YWCA,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양산YMCA, 양산시 학생회 모임'한우비' 양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해양소년단경남서부연맹, 한국청소년문화원, 해맑음문화활동센터
5	경상북도 (7)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문경YMCA, 안동YMCA, 전교조구미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구미지회, 포항YMCA
6	광주광역시 (19)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단기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화정동청소년문화의집, 광주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청청소년수련관, 광주북구청청소년수련관, 광주상무청소년문화의집, 흥효협동조합, 광주아동청소년의회, 광주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YMCA, 광주광산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7	대구광역시	대구YMCA
8	대전광역시	대전YMCA
9	부산광역시	부산YMCA
10	서울특별시 (4)	구로구 청소년단체연대, 목동청소년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11	세종특별시 (15)	세종YMCA, 새롬청소년상상센터(문화의집), 조치원청소년센터(문화의집), 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12	울산광역시	울산YMCA
13	전라남도 (32)	광양YMCA, 목포YMCA, 순천YMCA, 여수YMCA, 해남YMCA, 화순YMCA, 전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보성군청소년수련원,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완도군청소년문화의집,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여수시여문청소년문화의집,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장성군청소년수련관,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남청소년지도사협회, 전남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YMCA아이쿱생협, 여수YWCA, 어린이도서연구회여수지회,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신명사회복지연구개발원
14	전라북도 (2)	군산YMCA, 순창군청소년문화의집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YMCA
16	충청남도 (3)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17	충청북도	청주YMCA

4. 4.15 청소년모의투표 선거인단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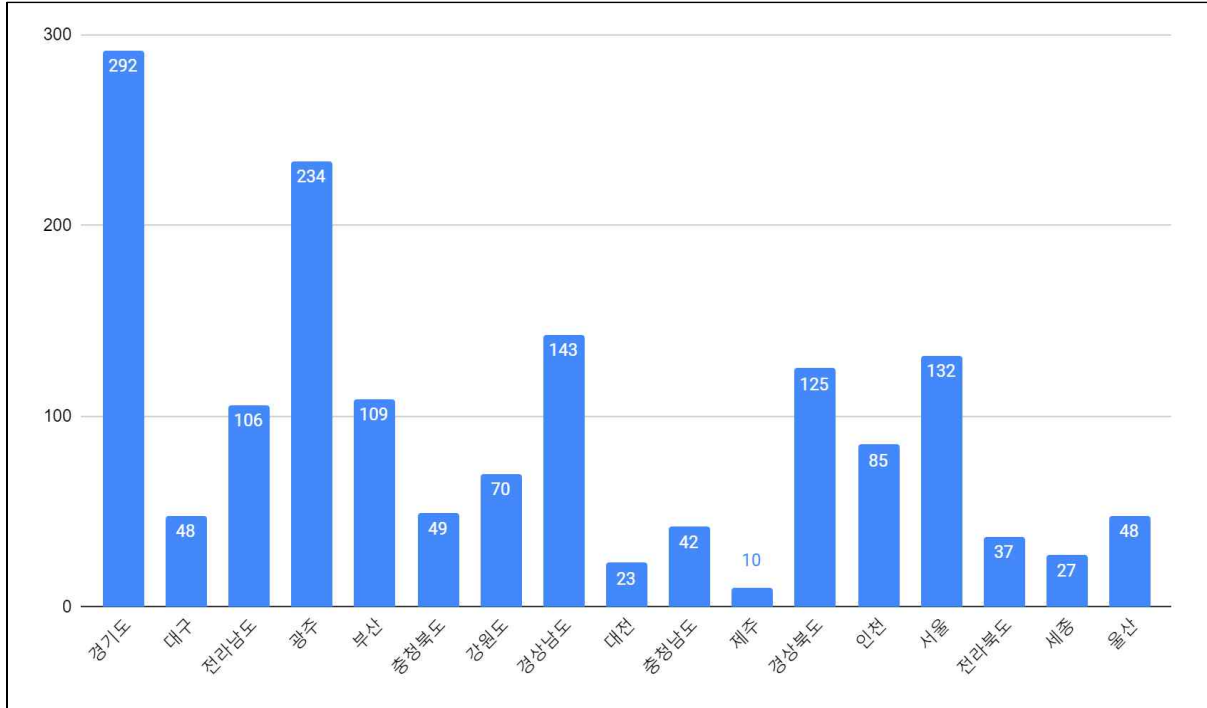
조사대상 : 18vote.or.kr에 선거인단 참여한 청소년

조사기간 : 2020년 4월 17일(금) ~ 4월 3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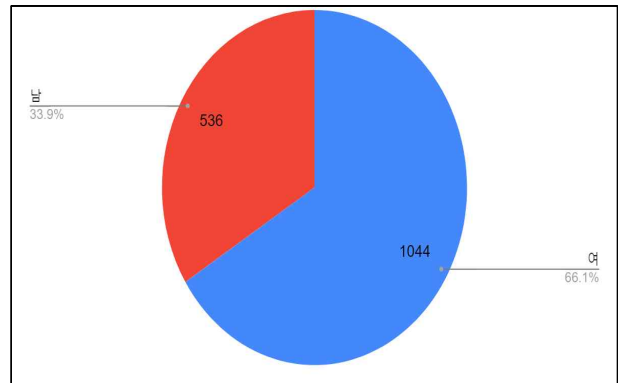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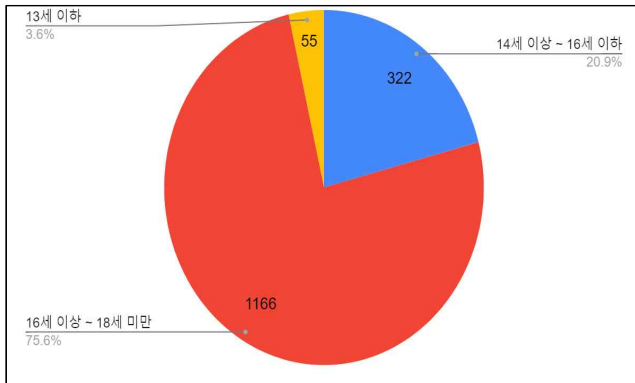
참여인원 : 1,580명

(비교를 위해 2017년 대통령 청소년모의투표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 제시)

1. 거주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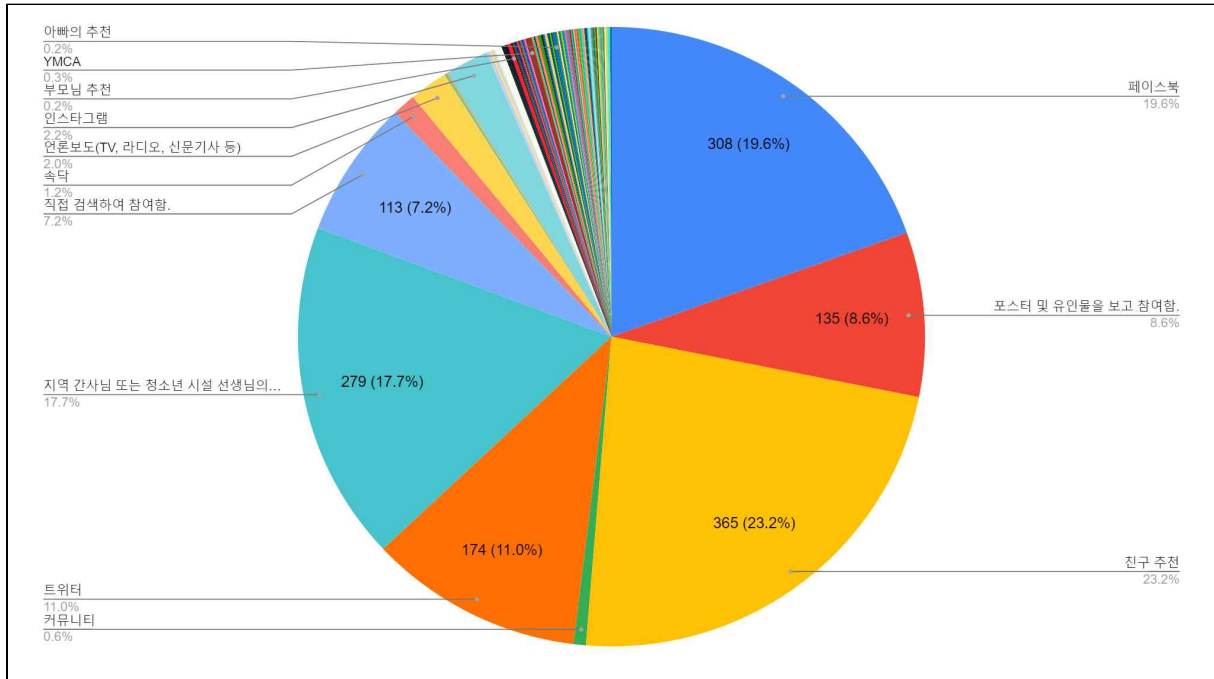


2. 연령대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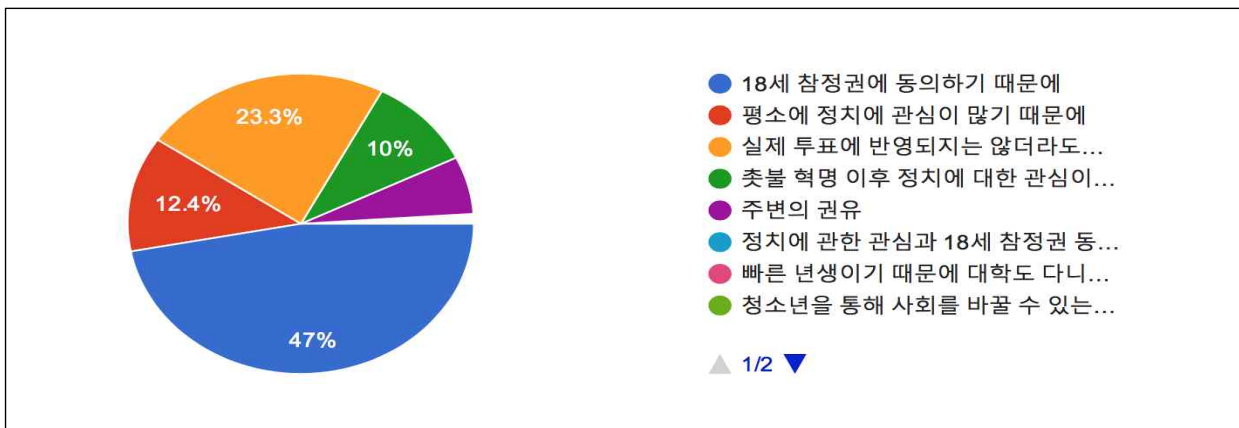


3. 이번 2020 제21대 청소년모의투표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된 경로

가. 4.15 국회의원 모의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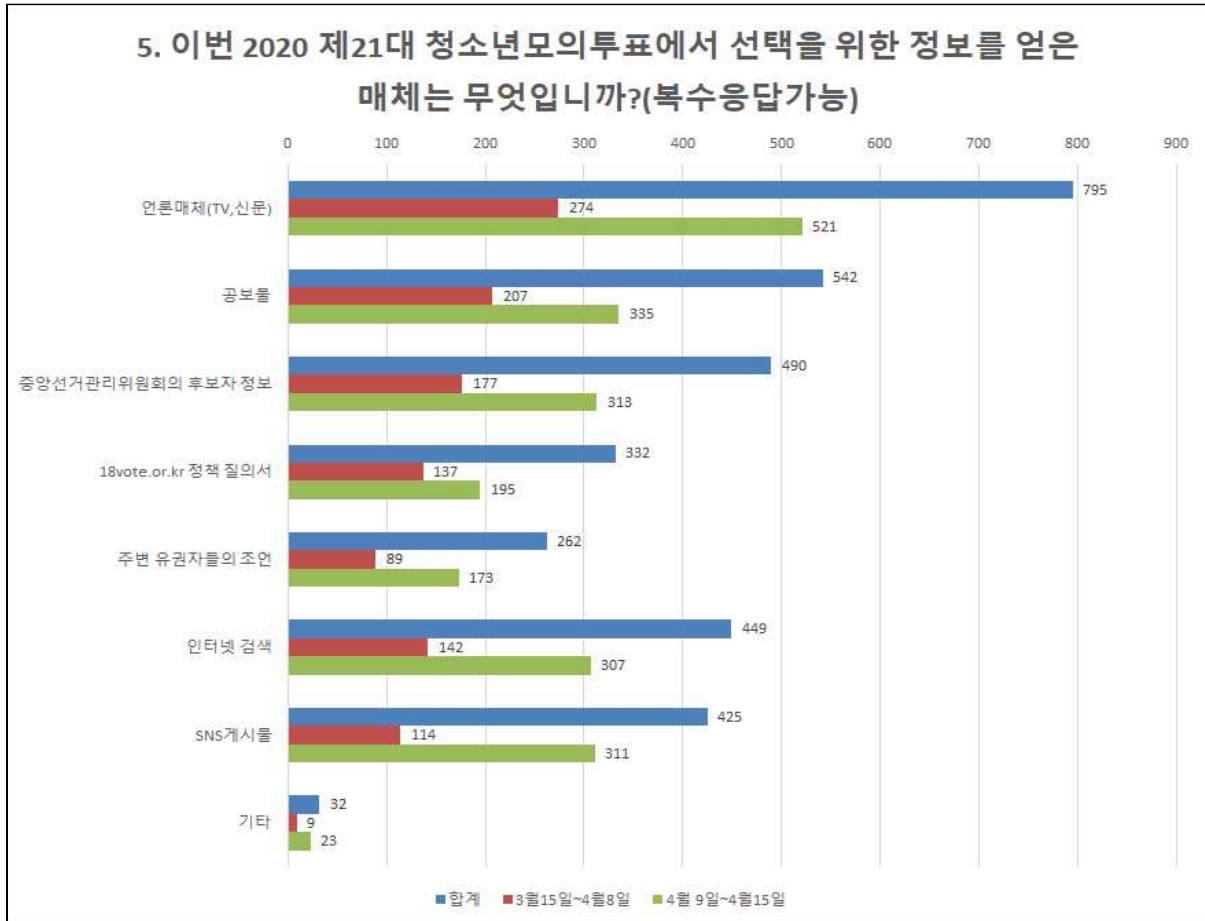


나. 2017년 대통령 청소년모의선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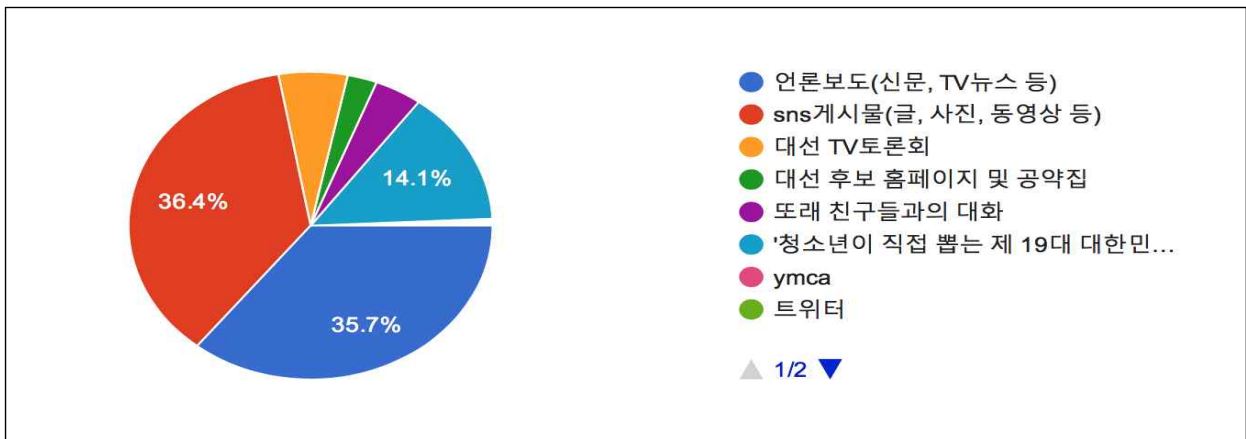


4.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 선택기준

가. 4.15 국회의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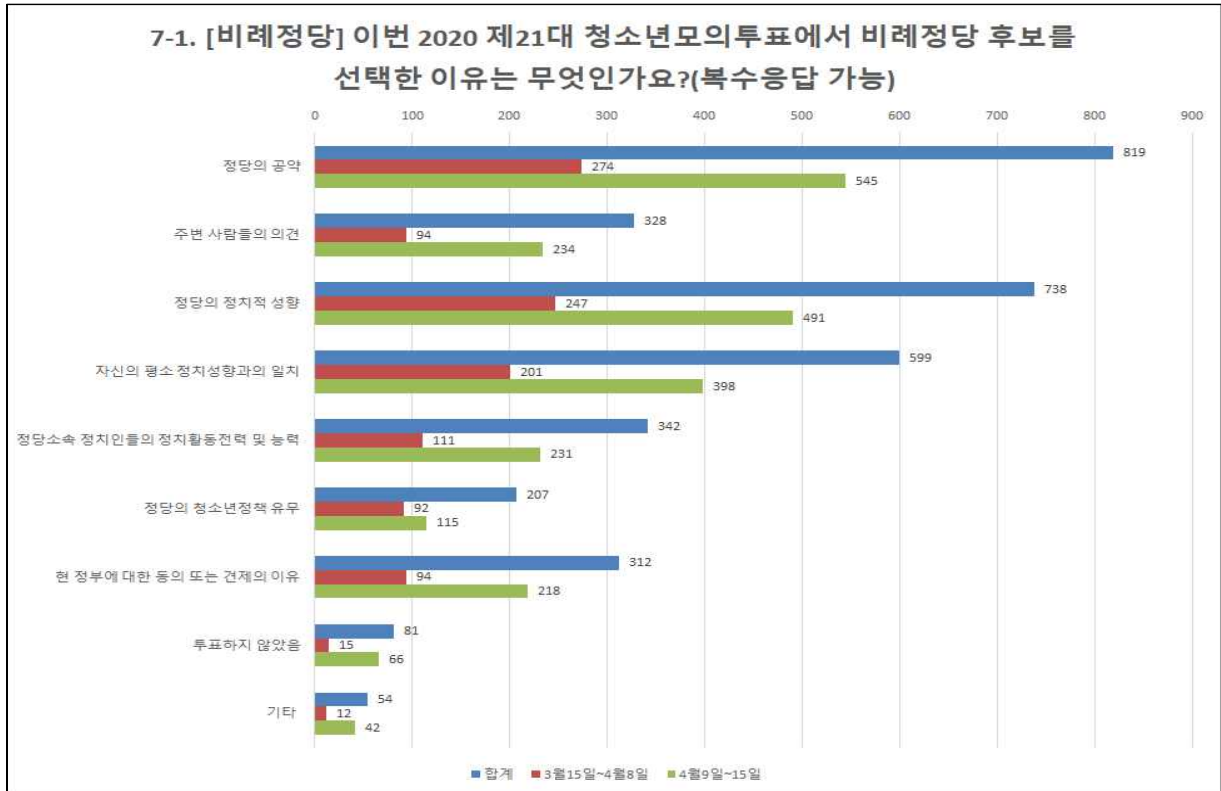


나. 2017년 대통령 선거시 대선 후보의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받은 매체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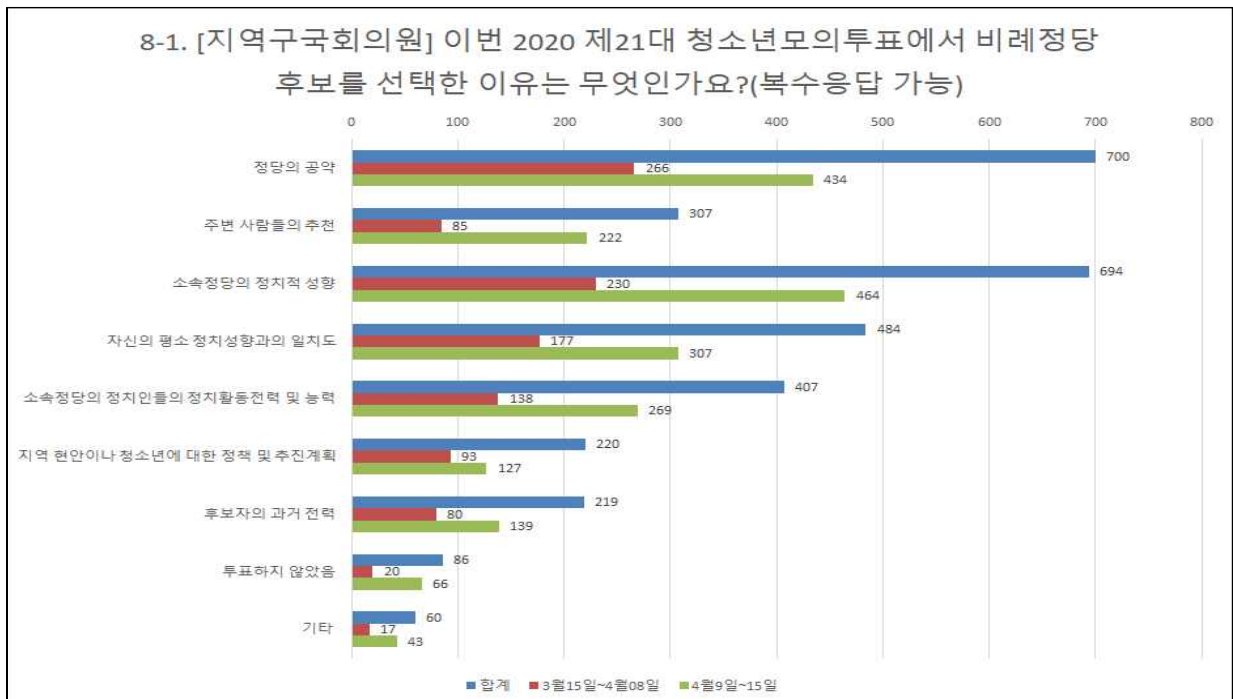


5. 비례정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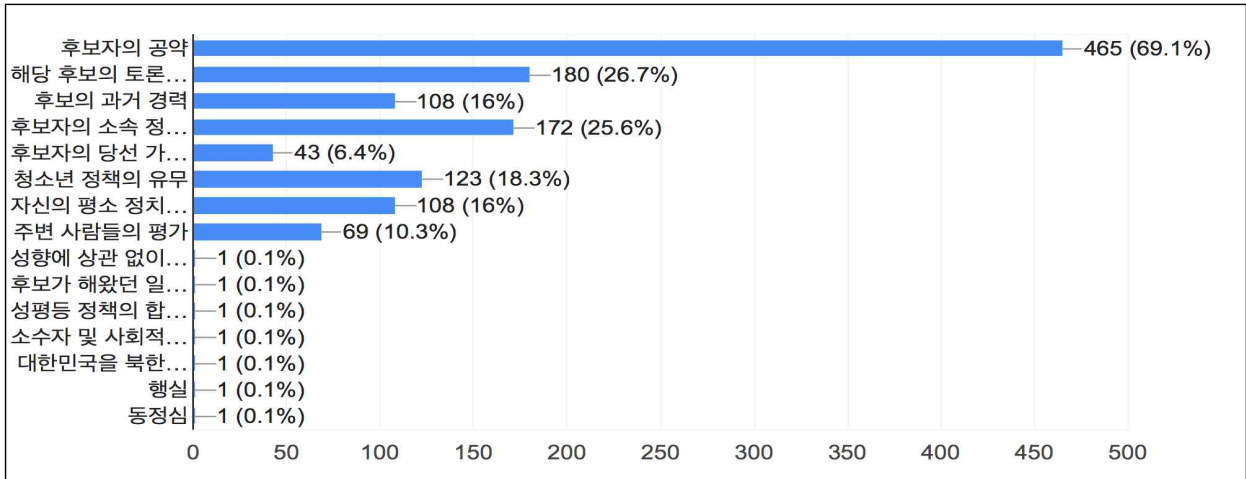
가. 비례정당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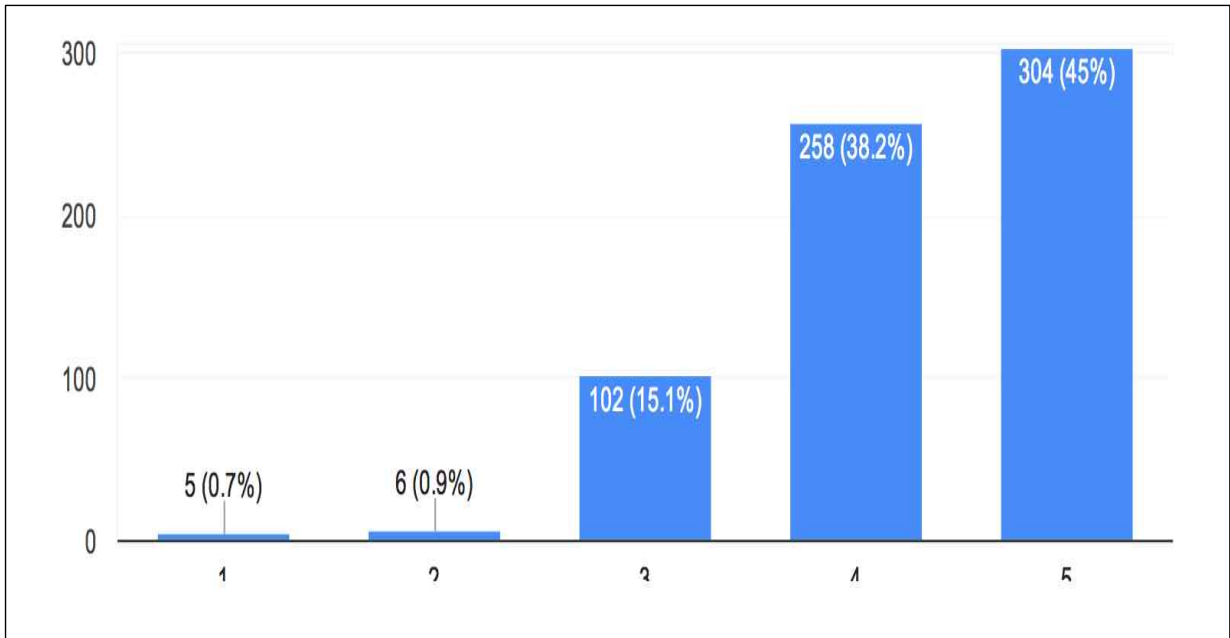
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다. 2017년 대통령 청소년 모의투표시 후보자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복수응답 가능)



6. 청소년 모의투표의 참여 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Ⅲ.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4.15국회의원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통해

첫째, 기자회견, 캠페인, 국회토론회 등의 단순한 형태의 어드보커시 운동을 넘어 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일각에서의 우려를 견어내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등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에서 약 12만명이 넘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사전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투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선거권은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의투표 운동 후 참여한 청소년선거인단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사전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투표를 하기전까지 모의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면면과 그들의 정책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포털과 언론의 기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 후보는 어떠하고 저 후보는 어떻다는 등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레 일반 유권자들과 별 다른없는 행동패턴을 보여주었다.

셋째, 보다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개표결과로 추정해보면, 참여한 청소년들이 후보자를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은 ‘도덕성’과 ‘정책’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역연고에 따른 투표행위나 특정 정파적 선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¹⁾실제 2017년 대선의 결과와 모의투표결과를 비교해보면 1위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개표결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 대선에서 득표율 6.5%로 5위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가 모의대선에서는 1위 문재인 후보와 불과 3.12%의 격차 밖에 나지 않은데다가 지역별 개표결과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선기간동안 보여준 심상정 후보의 성소수자 인권옹호 행보, TV토론에서 보여준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 위주의 토론 자세 등이 때 묻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호감을 얻었으리라 추측된다.

Ⅳ. 제언-청소년 정치참여 운동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전쟁과 독재정권을 겪었으며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또한 이룩하였다. 그 동안 강대국과 권력 야욕에 찬 이들로 인해 민중들이 겪은 수난은 헤아릴 수 없으나,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것은 모두 시민들의 힘이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고스란히 남아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도 시민인가? 청소년은 의사표현의 자유도, 정치적 대표자에 대한 선출권도 없다. 하물며 ‘학생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으며, 기본적 인권마저 제한당한다.

돌아보면 나라가 어렵고 큰 일이 있을 때 마다 용기 있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어 왔다. 항일독립

1) 향후 지역 유권자수와 비례한 교차분석, 투표자의 성향 파악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운동, 4.19혁명, 민주화운동, 참교육운동, 효순이미순이사태, 광우병사태, 박근혜대통령 탄핵운동, 촛불혁명 등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청소년은 시민으로 참여하여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참여는 더 작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는 좀 더 작고, 만만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거의 하루 종일 살고 있는 학교와 마을이라는 작은,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실현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고 이슈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화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피선거권 하향

18세로 선거권 기준 연령이 낮아졌지만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이번에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에서 피선거권 기준은 대통령 출마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며, 나머지 공직(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 출마자의 경우 만 25세이다. 이는 기존의 19세 선거권 기준 못지않게 보수적인 규정들로 여전히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절반만 보장되고 있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나 핀란드 등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또는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운영해온 국가들에서도 현재 18세 이상의 유권자 시민은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급 공직 선거에 자유로이 출마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수동적 시민’으로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18세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권과 정당 가입의 자유는 물론이고, 원한다면 직접 공직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 등을 현실에서 주장, 실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의 이익 혹은 특정 가치나 의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은 만18세로 하향되어야 한다.

둘. 정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정치교육의 제도화

민주적-정치적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고 독일과 같이 ‘정치교육센터’²⁾를 설립하여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 선거시기의 민주주의 교육 :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의 투표율은 20, 30대보다 높지만 20대가 되면 투표율은 전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거리감 즉, 자신의 삶을 정치가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후 정치참여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된다. 우리가 진행한 이번 모의투표는 앞서 제시한 정치교육의 제도화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2)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1952년 설립되어 국민들에게 의회주의적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정치규칙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는 학교에서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민주주의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³⁾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모의) 선거로, 핀란드에서는 1960년대에 첫 청소년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단체연합조직인 Allianssiry의 주관으로 의회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 전국 단위의 주요 선거 일정마다 병행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선거는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정책분석을 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⁴⁾ 독일은 교육부가 연방의회 선거 직전 모의투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또한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9월 전에 각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며 학생회에서 정당원을 초청하거나 정당에 가입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세를 벌이는 풍경을 볼 수도 있다. 핀란드는 모의투표를 주요 교육과정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고,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12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모의투표 자격을 주어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교의 교사는 최근 수업시간에 대선 '모의투표' 계기교육을 하려고 교감과 교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교감 결재는 받았지만 교장이 끝내 결재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선 계기교육 권장 공문을 학교에 보냈지만 교장에게 가로막힌 것이다.⁵⁾

이와는 달리 거창 셋별중학교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 177명이 이번 대선모의투표에 참여하였다. 얼마 전 1위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가 당선증을 직접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의투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과 방식의 논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넷. 청소년 정당 활동의 보장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영역은 자기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을 어릴 때부터 확인받으며 자란다. 정치란 어렵고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독일은 각 정당에 따라 다르지만 14세~16세,

3) 1980년대 이후 교육 정책 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자율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

4) 대선기간 동안 미국 어린이 잡지 'Scholastic News'에서는 전국의 153,000명의 만 6-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 할 것인지 모의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올 한해 미국 사회 전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하였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18-19세 유권자 중 80% 이상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타 연령대 보다 실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명확한 정치적 지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요구도 계속 되고 있다.

5) 오마이뉴스(17.05.01 윤근혁기자) 교육선진국은 학교 모의투표 '대박', 한국은 '쭈박'

영국과 프랑스는 제한이 없는 정당도 있지만 14세~15세 이상이면 정당가입이 허용된다. 핀란드의 경우 15세 이상은 정당의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있으며, 학교안에서도 허용된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가 학교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정당의 가입과 활동은 민주주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 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⁶⁾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법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정부기관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에서 앞장서 문제인 정부와 각 정당들과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V. 마무리 하며 : 학교와 지역사회를 정치참여의 장으로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모의투표의 시행,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 또는 학업분위기의 훼손은 오히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에 불과하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닫힌 교문을 열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또한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제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콜럼버스의 것이 아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지고 청소년들의 삶이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된 참정권 실현과 민주시민-정치교육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메리카 대륙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의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여정이 아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살고있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제도로써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이며 굳이 달걀을 깨어 세워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주면 스무날이 지나 스스로 부화하여 홀로 서게 될 것이다. 달걀은 콜럼버스의 것이 아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12)

[참고자료]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한겨레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BS 교육대토론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모의선거 토론편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대선모의투표 국회 토론회 발제문

[참고자료]

1. 2017년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결과

- 모의투표일시 : 사전투표 - 2017년 5월 4일 ~ 5일, 본 투표 - 2017년 5월 9일
- 대상 :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 참여 : 전국 51,715명
- 지역 :

지역	청소년 투표인단 참여인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전체 순위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총합계	51,715명	1위	2위	3위	4위	5위
강원도	2,814명	심상정(1,074명)	문재인(966명)	유승민(320명)	안철수(311명)	홍준표(84명)
경기도	12,279명	문재인(4,698명)	심상정(4,689명)	유승민(1,287명)	안철수(1,152명)	홍준표(288명)
경상남도	4,821명	문재인(1,756명)	심상정(1,698명)	유승민(630명)	안철수(425명)	홍준표(221명)
경상북도	3,530명	심상정(1,108명)	문재인(1,055명)	유승민(566명)	안철수(459명)	홍준표(261명)
광주광역시	2,413명	문재인(1,218명)	심상정(724명)	안철수(264명)	유승민(154명)	홍준표(15명)
대구광역시	2,140명	심상정(742명)	문재인(675명)	유승민(296명)	안철수(202명)	홍준표(113명)
대전광역시	1,693명	문재인(642명)	심상정(622명)	유승민(182명)	안철수(156명)	홍준표(61명)
부산광역시	3,090명	심상정(1,169명)	문재인(1,131명)	유승민(420명)	안철수(246명)	홍준표(90명)
서울특별시	6,148명	문재인(2,559)	심상정(2,392명)	유승민(602명)	안철수(440명)	홍준표(100명)
울산광역시	752명	심상정(288명)	문재인(285명)	유승민(95명)	안철수(57명)	홍준표(18명)

인천광역시	1,994명	문재인(819명)	심상정(813명)	유승민(173명)	안철수(132명)	홍준표(34)
전라남도	2,652명	문재인(1,294명)	심상정(800명)	안철수(259명)	유승민(210명)	홍준표(25)
전라북도	2,832명	문재인(1,406명)	심상정(901명)	안철수(241명)	유승민(210명)	홍준표(37명)
제주특별자치도	370명	심상정(163명)	문재인(151명)	유승민(29명)	안철수(19명)	홍준표(2명)
충청남도	3,035명	문재인(1,130명)	심상정(985명)	안철수(372명)	유승민(297명)	홍준표(114명)
충청북도	1,150명	문재인(460명)	심상정(459명)	유승민(119명)	안철수(76명)	홍준표(21명)
미입력 (해외동포포함)	2명	심상정(2명)				

2. 2018년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결과

만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청소년이 직접 뽑은 17개 시도 단체장 투표결과

- 모집기간 : 2018년 5월 1일~6월 13일
- 투표기간 : 2018년 6월 8일~9일, 13일
- 참여대상 :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 참여인원 : 전국 45,765명 (온라인 - 24,480명 + 오프라인 21,285명)
- 투표결과 :

지역	당선자								
서울특별시 971명	신지예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녹색당
		이름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김진숙	인지연	신지예
		득표율	33.3%	5.1%	12.9%	4.7%	2.2%	1.2%	36.6%
		소속정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이름	우인철	최태현	기권				
		득표율	2.3%	0.2%	0.9%				
부산광역시 1,209명	오거돈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이름	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이종혁	기권	
		득표율	54.1%	15.2%	7.2%	15.3%	6.3%	1.5%	
인천광역시 230명	박남춘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름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기권		
		득표율	66.6%	12%	6%	14.8	0		
광주광역시 1,281명	이용섭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이름	이용섭	전덕영	나경래	윤민호	기권		
		득표율	65.7%	10.7%	11.9%	11.5%	1.8%		
대구광역시 1,483명	임대운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름	임대운	권영진	김형기	기권			
		득표율	48.9%	30.3%	18.5%	2.1%			
대전광역시 1,443명	허태정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름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기권		
		득표율	56.5%	15.2%	13.6%	11.5%	3.1%		
울산광역시 822명	송철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이름	송철호	김기현	이영희	김창현	기권		
		득표율	45.4%	27.9%	17.9%	7.1%	1.4%		

제주도 951명	원희룡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녹색당	무소속		
		이름	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	원희룡		
		득표율	29.3%	2.9%	2.5%	17.2%	30.1%		
세종시 280명	이춘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름	이춘희	송아영	허철희				
		득표율	64.8%	21.2%	11.1%				
강원도 3,125명	최문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름	최문순	정창수	기권				
		득표율	75.8%	22%	2%				
경기도 5,433명	이재명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이름	이재명	남경필	김영환	이홍우	홍성규	기권	
		득표율	64.8%	14.8%	10.7%	6%	3.9%	2.2%	
경상남도 7,842명	김경수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름	김경수	김태호	김유근	기권			
		득표율	64.3%	20.6%	13.9%	0.9%			
경상북도 7,723명	오종기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름	오종기	이철우	권오을	박창호	기권		
		득표율	47.1%	20.7%	15.0%	15.4%	1.6%		
전라남도 3,325명	김영록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이름	김영록	박매호	민영삼	노형태	이성수	기권	
		득표율	60%	6.4%	12.8%	8.9%	9.6%	2%	
전라북도 7,320명	송하진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이름	송하진	신재봉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기권	
		득표율	61.2%	7.3%	13.2%	7.9%	6.9%	3.1%	
충청남도 1,606명	양승조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코리아				
		이름	양승조	이인제	차국환	기권			
		득표율	63%	23%	12.3%	1.6%			
충청북도 721명	이시종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름	이시종	박경국	신용한	기권			
		득표율	64.4%	15.2%	18.1%	2.1%			

만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청소년이 직접 뽑은 17개 시도 교육감 투표결과

지역	당선자								
서울특별시 971명	조희연	이름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득표율	370/52.7%	121/17.2%	200/28.4%	11/1.5%			
부산광역시 1,209명	김석준	이름	함진홍	박효석	김성진	김석준			
		득표율	34	10.3	15.0	40.5	1		
인천광역시 230명	도성훈	이름	도성훈	고승익	최순자	기권			
		득표율	61.7	16.9	21.3	0			
광주광역시 1,281명	장휘국	이름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득표율	28.5%	49.7%	20%	11.7%			
대구광역시 1,403명	김사열	이름	홍덕률	강은희	김사열	기권			
		득표율	20.7%	36.5%	39.4%	3.3%			
대전광역시 1,443명	성광진	이름	성광진	설동호					
		득표율	49.9%	46.1%	3.9%				
울산광역시 822명	노옥희	이름	권오영	장평규	박홍수	노옥희	구광렬	정참모	김석기
		득표율	12.3%	9.2%	9.5%	29.2%	17.8%	8.3%	13.5%
제주특별자치도 951명	이석문	이름	김광수	이석문	기권				
		득표율	47.1%	51.5%	1.3%				
세종특별자치시 280명	최교진	이름	최교진	송명석	최태호				
		득표율	63.5%	16.7%	19.6%				
강원도 3,125명	민병희	이름	민병희	신경호	기권				
		득표율	65%	33.7%	1.2%				
경기도 5,433명	이재정	이름	배종수	송주명	임해규	김현복	이재정	기권	
		득표율	18.5%	21.1%	17.3%	5.8%	34.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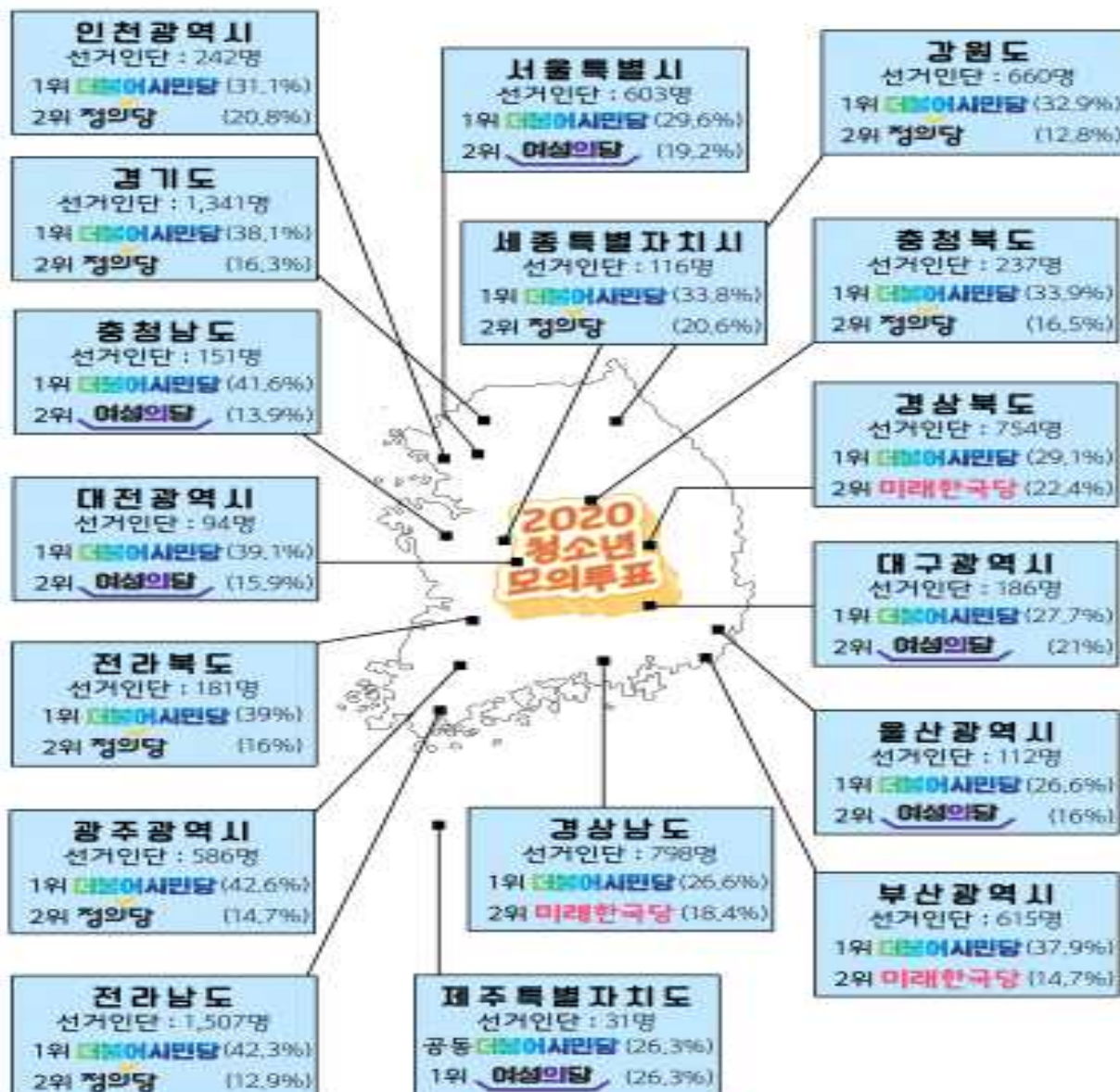
경상남도 7,842명	박종훈	이름	김선유	박종훈	박성호	이효환	기권		
		득표율	17.0%	51.6%	11.9%	17.1%	1.3%		
경상북도 7,723명	이찬교	이름	안상섭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문경구	기권	
		득표율	29.4%	11%	31.0%	14.7%	11.4%	1.4%	
전라남도 3,325명	오인성	이름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기권			
		득표율	26.4%	30.6%	32.7%	2.1%			
전라북도 7,320명	김승환	이름	이재경	서거석	김승환	황호진	이미영	기권	
		득표율	14%	22%	30%	10%	21.4%	1.9%	
충청남도 1,606명	김지철	이름	김지철	조삼래	명노희				
		득표율	45.9%	27.3%	25.2%	1.4%			
충청북도 721명	김병우	이름	김병우	심의보	기권				
		득표율	61.1%	37.2%	1.3%				

2020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청소년 모의투표 비례 정당 개표 결과

- ▶ 모 집 기 간 : 2020년 3월 15일 ~ 4월 15일
- ▶ 투 표 기 간 : 2020년 4월 10일 ~ 11일(사전투표), 15일(본투표)
- ▶ 참 여 대 상 : 만 18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 ▶ 참 여 인 원 : 전국 8,214명

전국 청소년 모의투표 비례 정당 결과

1위 **더불어시민당** (35%) 2위 **정의당** (14.3%) 3위 **미래한국당** (12%)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참정권 이야기

김정빈(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의장)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로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할 광주광역시 제4대 아동·청소년 의회 의장 김정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18세 참여의 의미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청소년에게는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의 만 18세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54만여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는 모두 14만 3천여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은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주체적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과정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고 그것은 간절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성인 유권자들이 ‘교복입고 투표하기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호 0번 청소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며 타후보에게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43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외치며 삭발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올해 선거에서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하며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정치활동

청소년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활동은 지금까지 어른들이 만들어온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현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올해 선거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첫 투표 독려와 정책알리기, 선거교육의 정치활동 등의 펼쳤습니다.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 단체 ‘청소년이참여하는시간’은 등교 교육이 이루어져 시행되지 못한 선거교육을 대신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또래 유권자에게 SNS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참정권 손글씨 릴레이’를 통해 청소년 첫 투표를 독려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에서의 소속정당인 ‘우리가 해결한당’은 지역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나선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도 민주주의의 구성원임을 당당하게 외치는 인권실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첫 투표와 모의투표 참여 소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도 유권자로 참여했습니다. 첫 투표이니 만큼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실감이 날 것 같아, 당일 날 오전 일찍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용지에 적힌 제 이름과 생일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나도 어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순간을 위해 이때까지 했던 활동이 스쳐 지나가며 그 결과물을 받은 것 같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나이임에도 선거를 하지 못한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만17세, 만16세 이하로 연령인하 되었다면 이 순간을 함께 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이를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만17세이하 모의투표는 전국 8,21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모의투표를 참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소하기만 한 투표가 조금은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 “투표를 해 보니 개표방송과 결과에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나아간 만큼 더더욱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주위에 아직 선거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도 존재했습니다.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협업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도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누릴 자격은 충분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사람은 15세 정도가 되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에 인식 틀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도 정치 분야에서 성인과 같은 관심과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을 주지 않았던 것과 같이 나이가 어려 미성숙하다는 부당한 근거로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참정권은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연령 인하, 피선거권 연령인하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차티스트운동에서 대중정당 운동으로 나가길

조재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1. 노동나동당의 원내진출을 꿈 : 김정빈 아동·청소년 의장님

먼저, 김정빈 아동·청소년 의회 의장님의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참정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작 당사자죠. 교사인 저와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출마”는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 그나마 18세 참정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수많은 청소년 활동가들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 나이가 17세와 16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가 있는 노동나동당을 뽑으려 했는데 안보이던데?”라는 말씀은 조금 있다가 같이 의논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장피아제를 언급하셔서 반갑습니다. 인지 발달상 15세 정도면 성인과 같은 인식틀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를 언급하셔서 설득됩니다. 다만, 우리 한국적 정치 경험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제구실을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해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이 아흔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법정에는 나오지 않는 이십구만원 할아버지보다 15세 된 어떤 청소년이 더 정치적, 인지적으로 낫겠지요? 미래에 김정빈 의장님이 소속 정당과 꼭 성장하셔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15세 참정권을 꼭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꼭 힘을 보태겠습니다.

2. 참정권 교육에서 정치교육으로 : 김진곤 사무총장님의 발제문

김진곤 사무총장님의 글은 발제문을 받고 정독을 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만 18세 선거권 시대가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하신 지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년과 더불어 묵묵히 같이 해주신 청소년의 ‘친구’들이 바로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p에 있는 청소년 활동가의 “당사자 운동의 차원에서 추동할 수 있을까?” 푸념하지만, 김진곤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단체가 청소년들의 ‘차티스트’운동에 같이합니다. 저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같이 할거고,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사단체도 지지할 듯합니다. (물론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4.15 국회의원선거 청소년 투표 모의 운동 과정을 잘 읽었습니다. 이에 들어간 그 올바른 정치적 철학에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1.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가능성 확인, 2. 일반 유권자와 비교하면 미성숙하지 않은 투표성향 3. 깨끗한 정치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확보했다면서, 선거권의 하양과 정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정치교육의 제도화, 청소년 모의투표의 법제화를 제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당 활동의 보장을 제안하셨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도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저는 김진곤 사무총장님의 발제문에서 주목한 어구가 “정치교육의 제도화” 부분입니다. 실은 학교현장에서 ‘범교과학습’으로 교육청에서 의무적인 수업시수가 배분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이란 주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기본권에 함양에 대한 교육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이란 가치를 내걸고 “학생은 지금 여기의 시민이다!”⁷⁾는 참으로 급진적인 진

7)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학생자치활동길라잡이』, 표지, 2018. 학생은 ‘시민’인가라는 주제는 논쟁적 주제라고 보인다. 그러면 학교는 ‘시민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미 시민인데 양성은 왜 하는가? 기만이 아닌가? 시민 교육이란 말 자체가 ‘학생’은 교육의 대상으로 구분을 지어야 함을 내포한

취적인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김진곤 사무처장님의 발제문에도, 또 김정빈 의장님의 글에도 <청소년은 시민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는 명징한 명제처럼 전제하셨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을 듯합니다. 잠정적으로 저처럼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다.”라는 원칙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정치교육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반가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란 개념보다 더 정확한 어구가 ‘정치교육’이라는 고민을 요즘 개인적으로, 혹은 일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용어가 ‘도덕화’ 해서 사용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민주시민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의가 힘들지만, 그 어감이 마치 ‘옳은 것’을 전제해두고 즉, 답정너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교육은 다릅니다. 정치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어긋나지만, 이를 “폭력”(주먹, 칼, 총, 탱크?)이 아닌 “언어”로서 풀어나가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욕망과 이해관계가 없는 무색 무취한 ‘국가’에 이익에만 복무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이해관계”를 관철하는 현대적 관점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일연방 정치교육 센터의 사례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만만한’ 디테일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김진곤 선생님은 p12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는 좀 더 작고, 만만하게 시작되어야 한다.”라면서 “학교와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이에 대한 덧붙여 말하는 수준에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먼저, “작고 만만한 수준”에서 시작하되 좀 더 **커다란 이야기가** 속 시원하게 되어야 할 듯합니다. 정치교육이든, 민주시민 교육이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치적 장애인입니다. 교사들은 정당 가입을 금지해 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논쟁이네요. 그렇게 결정되니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교육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공교육이란 종교와 특정한 이념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교회와 절에 가서 ‘신자’가 될 자유가 있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포교를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듯, 정당 가입을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이념을 교육에 이용할 것이란 발상은 아주 후진적입니다. 교사 자신이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떨어지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란 고작 “삼권분립” 어찌고… “헌법의 기능”… 어찌고… 투표의 원칙 4가지 수준이 어찌고 하는 오히려 정치를 짜증 나게 만들어 버리는 기능뿐이 못합니다. 왜 우리 한국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원칙을 준용한 교육에서의 정치교육 원리를 합의**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당사자들의 논쟁성을 재현시키면서도 학생 삶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한다는 정치교육 원리가 이미 보편화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교사가 이 원칙을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사 자신이 정치적인 활동에서 소외되었고 정치혐오의 반정치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학교 교육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각종 정치 관련 규제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여기 정당에 계시는 정치인들이 참여하셨

다. 그래서 박상훈 휴머니타스 대표는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지녀야 할 태도적 측면에서 ‘지금 여기의 시민’이란 구호는 매우 타당하지만, 엄밀한 개념적인 분석에서는 고려해야 할 구호인 듯하다.

8) 박상훈, 『정치의 발견』, 휴머니타스, 2015. P57.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책임 윤리를 강조하며 권력을 선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정치개념을 마키아벨리와 베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정치란 다 더러운 것이라며 정치혐오와 반정치적 담론이 오히려 공동체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

지요. 정당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만 느끼곤 합니다. 상점이 개점하면 마구 흔들어대며 큰 음악에 맞춰 흔들어대는 바람 인형광고처럼 선거철만 되면 보이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온다”라고 욕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일상에서 정치 활동이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치신인이 나오기도 힘든 정당 활동규제와 관련해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학내에서 정당이 선거 활동이 엄청난 제약이 있었지요? 모의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대단 하긴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에 가입한 정당이 학내에서 자유롭게 선거홍보가 가능한 선거 관련, 정당법 관련 규제가 꼭 해소되어야 할 듯합니다.**

한국은 행정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깨끗한 선거”라는 핑계로 정치 활동을 불온시하는 풍조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기성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여론이란 미명으로 규제하는 것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미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독일정치교육을 JTBC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가 어리다고 선거권을 안 주었는데, 선거권을 주고 나서도 ‘대표’될 자격 나이는 높여놓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거든요. 공동체 일원으로, 의사결정권을 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표가 될 권리도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점이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해결 되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에도 독일의 19세 녹색당 의원 만나려면 같은 정치인이 출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제 정치세력들이 합의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이든” 혹은 “젊은”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쓰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왜 나이가 필요한가요? 모든 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바뀌야 해. 젊은 사람으로”. 하지만, 왜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늙은 자들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해”라고 해요. 그리고 본보기로 몇몇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한 듯 내세웁니다. 하지만, 늙은 자들이 내세운 청년들의 정치 실력은? 돌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낙선한 통합당 이준석 씨 외에 비례가 아닌 지역구를 꾸준히 지키며 20대부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나 싶거든요. 물론 이준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하겠지요. 잘난 학벌에, 서울에 사니 방송도 하고, 자기 말로는 무슨 비트코인 투자도 하나요. 어렵지만, 저는 ‘청년’ 정치인들 운운하면서 마치 “어린아이” 내세우는 어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정치인은 어떻게 길러지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곤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와 ‘마을’이 되어야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학교는 실질적인 ‘정치’ 활동이 금지된 공간이고, 마을은 교회 십자가가 더 많은 형편이잖아요? **정당 가입 나이**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 경험을 쌓은 젊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상상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만나려면만은 19세라서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그가 10세부터 정당 가입을 했고, 거의 10년 동안 바닥에서 정치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1당이 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보세요. 10년 이상 정당 활동을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변호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삼성전자 임원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얼굴이 잘생긴 소방관을 하거나 해서 갑자기 ‘민주당’ 딱지를 달고 선거에 나왔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실력’을 기대할 수 없죠. 차티스트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운동

9) 정당 가입에 왜 나이가 붙었는지 의문이 든다. 교회나 절, 혹은 이슬람 사원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정당에 가입하면 마치 잘못된 이념에 물든다고 생각하는 반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닐까? 정당 가입 나이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입니다. 선거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권을 가지고 대다수 노동자가 직능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대중정당 운동으로 발전**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세의 선거권 확보 운동은 또 다른 정치발전의 운동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가들이 ‘정당’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든.

네 번째, 이 지점은 광주지역 청소년 정치와 관련된 제언입니다만, 광주에서 아동·청소년의회의 위상문제입니다. 제 개인 경험입니다만, 작년에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과 관련되어 “인기 위주의 투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정당 방식”의 학생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를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저 자신의 정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치란 것을 옳고 그름이 아닌 욕구가 반영된 ‘공동체의 타협 문화’를 가져가는 근원적인 인간적인 일임을 알게 되었어요. 피구를 좋아하는 “축구당”과 티볼을 좋아하는 “티볼당”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거나 피구를 좋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홍보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과정에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타협도 합니다. 예를 들어 티볼당은 축구대회도 열어주겠다... 는 정도로 말이죠. 아주 재미있게도 이때 여학생 중 일부가 “그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고 하자 의견을 받아 “피구대회”도 추가하며 “운동장에서 만화 그리기” 이벤트도 하겠다고 합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란 아재가 그랬나요? <인체의 해부는 원숭이의 신체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증진한다> 저는 생생한 정치장면들을 목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의회가 광주에서 운영됨을 알았고 ‘티볼좋아당’활동에 관여(?)하고 지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학생이 된 그 의원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네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광주에는 **아동·청소년의회와 학생의회가 따로 존재하는가**. 이 둘의 접점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교육은 매우 강조하면서, 실제 각 학교 단위의 ‘정치’는 주로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도 아동·청소년의회를 두고 지원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지역마다 “학생의회”를 운영합니다. 광주동부초등학교학생의회, 중고등학교학생의회...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학생과 청소년은 그 사람이 다른 걸까요? 진정 권한을 주면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광주광역시 의회는 “우리 광주는 오일팔의 민주주의 도시”라는 점을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해 스스로 기특해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또 진보교육감의 광주교육청도 학생대표들을 불러놓고 “학교폭력을 없애는 법” 따위나 “지역에 어려운 분들, 자원 봉사하기” 등등의 이벤트로 “보시기에 좋더라”를 시전하는 것은 아닌가요?

학교 밖/학교 안을 구분하여 “보시기 좋더라”라는 형식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진정한 자치적인 힘을 기르는 청소년/학생 정치체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제언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당’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회들만큼 고민했으면 합니다. 교회들 가보면 어린이부, 중고등부 해서 계속 꾸준한 교육과 참여기회를 줍니다. 나는 정당도 이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강한 정당이 없으면 좋은 정치는 꿈꾸기 힘듭니다. 강한 정당의 바탕은 바로 청소년이라는 것, 다 알지요. 하지만, 작은 정당들은 이를 실현할 자금이 없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안 되네요. 큰 정당은 청소년을 길러내서 강한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유명하고 뜬 사람 픽업하는 데에 골몰하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어린이/청소년 정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정당이 많이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정치란 더러운 것’이란 반정치의 정서를 극복하는 문화가 전제되어야겠지만.

만18세 선거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시민의 불온한 정치를 허하라

문정은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미 OECD 회원국 중 34개 국가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가지며,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만18세 인구는 54만9000여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기에는 일부 고3 학생들까지 포함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2년 뒤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는 만16세까지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불과 석달 앞두고 법이 개정되고, 모의투표와 관련한 보수적 결정 등으로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미흡했다.

특히 교실에서 교사들이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이끌기 어렵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 여러 법령에 걸쳐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에서는 교사가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직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22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현재 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정치단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데다 향후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들도 자신의 사상과 정책의 지지 여부 등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 또, 정당가입도 각 정당별 차이가 있다. 현행 정당법상의 청소년의 당원 가입 연령 제한을 풀고, 당원 가입 이후 정당 내 적극적인 당권 발휘 여부도 쟁점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93조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선거 시기 제한하고 있는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이다.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선관위의 문제도 있다. 이제 유권자가 된, 그리고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선거 교육이다. 그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되는 것

이다.

일찍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정치교육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이라는 수업을 필수로 배워야 하며, 청소년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강령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정당과 정당이 하는 일을 배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과 그들이 내놓는 해결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핀란드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를 법적 기구로 두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 의회에 참여해 본인의 의견을 대신 펼쳐줄 대표를 선출하고, 청소년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더 이상 정치는 ‘어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인식. 학교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그곳에서 배우는 것,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모두 정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해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실에서의 국어, 수학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절로 정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우리는 만 18세가 결혼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만 15세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이 가능하고, 만 17세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은 없었던 것.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은 2005년부터 20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매년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 연령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다. 무려 18년 전인 1992년 청소년 활동가들은 “선거권을 만 16세로 확대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2004년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달라며 ‘입법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5년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는 성과를 얻기도 한 것.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은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어냈다. 이런 결과는 입시에만 치우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만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만큼 시민으로서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연령 통일도 필요하다.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을 통한 출마의 자유도 보장해야 함이 당연하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연동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교실 등에서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민주시민교육, 정치토론,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경험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 되어야 하며, 모의투표를 비롯한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

치 참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한다.

청소년은 지시받고 관리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젊은 시민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청소년은 젊은 시민으로서 사회에서도 좋은 이웃,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위기와 도전들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청소년들의 불온한 정치를 허하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지구를 지키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임을 회의하지 말자.

18세 선거권 원년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정민기(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1. 들어가며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총 200석)
- 선거연령의 변화. 1948년 21세,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
- 청소년 선거권 하향 운동의 출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백기완 후보 선거운동부에서부터(만 16세 선거권 주장)
-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마침내 18세 선거권의 시대가 열려
- 만 18세 선거권으로 ‘학교(교실)의 정치화냐?’ ‘10대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이냐?’ 간의 논쟁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정치논쟁은 현실화 되지 못해
-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논쟁은 어떤 결론이 났을까?
-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총 300석),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민주당 17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2. 청소년 모의투표운동 결과를 보며

- 8,214명의 모의투표 선거인단 참여, 6,030명의 투표 참여. 어떤 청소년들이 참여했나?
-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나, 후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제공되었나?
- 모의투표 결과가 주는 의미(1위 더불어민주당, 2위 정의당, 3위 미래한국당)
- 정치교육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정치교육의 장으로서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의 가치
- 여전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다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불을 지피자!

- 18세 선거권 원년의 해, 다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출발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부터
-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정치교육의 의무화를,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책제안 및 시민옴브즈맨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실제적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 ‘청소년 모의투표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운동을
-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의 개정 운동을
- 아동청소년의회 및 학생의회, 청소년 참여기구 등이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활동을
- 더 나아가 ‘18세 선거권’을 ‘16세 선거권’으로 낮추는 운동을
- 그리하여 보다 준비되고 성숙된 청소년 참정권 운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정치참여의 장으로 만들어 다가오는 2022년,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자!

만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모꽃노을(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

I. 모두가 바라왔던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애써왔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나 노력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선거권 하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국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II. 여전히 존재하는 선거권 하향의 한계

하지만 만 18세로 하향된 선거권이 첫 적용되어 치러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교육의 미흡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 관련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도 주변 많은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주위 친구들 중에서는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맨 손에 도장을 찍어서 선거 인증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만 18세'로의 선거권 하향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가 가능했다. 따라서 6월 출생자인 나는 매우 아쉽게도 선거가 불가능했다. 나를 포함하여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생일이 늦어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후배들 중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선거권에서 만족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선거권 하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지난 선거에서의 청소년 참여

지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와 광주광역시 아동 청소년 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단체 '청소년이 참여하는 시간'(이하 청참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또래 친구들에게 선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 통화 하듯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모의 투표 운동 또한 독려했다. 개인적으로 나도 청참시에 소속되어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했는데,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재미있고, 쉽게 선거에 대해 알려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는 주위의 반응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나는 '모의 투표'야 말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실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모의투표에 참여해보았는데,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익힐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좋았다. 사실 청소년은 오랜 시간동안 투표권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에서 배제되어왔던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적용된 만 18세 선거권도 해당되는 청소년은 전체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의 투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져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IV. 선거권 하향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바라왔던 만큼 만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청소년이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며, 소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거권 하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이다. 선거를 하기 전에는 지역 구 후보와 정당들의 주요 공약을 확인하고, 선거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는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저 부모님이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본 이름 같아서 등의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행하는 사람들이 몇몇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자율 활동 시간을 통해 인문 계열, 자연 계열에 상관없이 정치와 선거의 의미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이 아니라 토론 활동이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더욱 정치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관련 캠페인이나 청소년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내가 참여했던 청참시에서 한 활동들이나 모의 투표 운동처럼,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캠페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고등 의회나 아동 청소년 의회와 같은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 아마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업과 이러한 활동들을 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서도 여러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에게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투표권이 생겼고,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는 구성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만 말고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며 정책 반영에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V. 마무리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 18세 선거권을 이루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학교, 청소년 기관, 청소년 참여기구 등 다양한 단체에서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무시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피력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당당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